

보도시점 2026. 7. 15.(수) 12:00 배포 2026. 7. 9.(목) 13:30

국민의 삶을 지원하는 국민 중심 인공지능(AI)·데이터 체계 구축

- 국가데이터처, 대통령 주재 업무보고 실시 -

국가데이터처(처장 안형준)는 7월 15일(수), 대통령 주재로 ‘국민참여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국가데이터처 업무보고」를 실시하였다.

인공지능(AI)시대에 대응하는 국가데이터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데이터 기반 정책 지원을 본격 추진하는 방안을 발표하였다.

국가데이터처는 상반기에 국가데이터의 체계적 관리와 연계·활용 기반 구축을 위한 「국가데이터기본법」 제정안을 마련하였고, 주택소유자 등록부(잠정)를 기존보다 8개월 이상 앞당겨 구축하는 등 정책맞춤형 융합데이터 개발을 본격화하였다.

또한 ‘5극 3특’ 권역·지역 간 공급망을 파악할 수 있는 지역공급사용표를 개발하고, 통계정보 시각화 서비스를 실시하는 등 국정과제를 뒷받침하고 국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통계 서비스와 인프라를 확대하였다.

국가데이터처는 하반기부터 “국민의 삶을 지원하는 국민 중심 인공지능(AI)·데이터 체계” 구축을 목표로 세 가지 역점 과제를 추진한다.

첫째, 인공지능(AI) 데이터 관리체계 구축 및 활용을 본격화한다.

각 부처의 정책 자료를 인공지능(AI)이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로 구축하기 위해 국가데이터처 특화형 인공지능(AI)을 선도모델로 구축하여 범정부에 확산할 계획이다. 또한 인공지능(AI) 신뢰성과 활용성을 높이고자 인공지능(AI)이 공식통계에 기반하여 환각 없이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친화적 메타데이터를 단계적으로 구축할 예정이다.

둘째, 데이터 거버넌스와 데이터 허브를 구축한다.

국가데이터처의 전수등록부와 부처별 주요 데이터센터의 정보를 안전하게 연결하는 「모두의 국가데이터(Hub & Spokes)」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데이터를 한 곳에 모으지 않고, 센터 간 전용망으로 연결하여 연계·활용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동형암호 등 신기술을 통한 데이터 보호도 강화하여 데이터 연계·활용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셋째,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 맞춤형 통계·데이터 서비스를 확대한다.

인공지능(AI) 기반 물가 상시 모니터링, 통계인용 기사 자동 검증 및 축제·행사 인구밀집도 예측 정보 제공 등을 통해 민생 현안을 지원하고, 아동·청년·중장년층·고령자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표를 제공하여 정책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투자동향과 생활인구, 지역의 산업 및 인구·가구 구조 변화를 보여주는 통계를 확충하고, 지방정부 행정자료 및 등록부를 연계한 지역단위 등록부 구축과 공공자료 및 민간자료^{통신·카드자료} 등을 결합한 지역단위 민·관 결합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지방주도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민 체감 편의성 향상을 위한 국가정상화 과제도 적극 추진한다. 통계데이터센터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하여 24시간 중단 없는 데이터 분석 환경을 제공하고, 등록부 구축 시에 잠정 체계와 월간·분기 구축 체계를 도입하여 등록부 제공 시기를 대폭 단축함으로써 대국민 활용도를 높일 예정이다.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인공지능(AI)·데이터 혁신을 통해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국가데이터 체계를 완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붙임: 국가데이터처 업무보고 자료

담당 부서	기획조정관 기획재정담당관	책임자	과 장	이진석 (042-481-2584)
		담당자	사무관	손현정 (042-481-2128)
담당 부서	국가데이터기획협력관 국가데이터기획협력과	책임자	과 장	김지은 (042-481-6959)
		담당자	사무관	육동형 (042-481-2314)
담당 부서	국가데이터허브정책관 국가데이터허브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수영 (042-481-2313)
		담당자	사무관	김민주 (042-481-2382)



국가데이터처 업무보고

2026. 7.

목 차

I. 상반기 주요 성과	1
1. 국가데이터의 관리 및 연계·활용 기반 마련	1
2. 국정과제를 뒷받침하는 통계 서비스 및 인프라 강화 ..	2
II. 핵심 추진과제	3
1. 역점 과제	4
2. 지방주도 성장 과제	7
3. 국가정상화 과제	9
4. 기타 현안과제	11

I. 상반기 주요 성과

1 국가데이터의 관리 및 연계·활용 기반 마련

- **(국가데이터 관리 기반 조성)** 국가 중요 데이터의 체계적 관리체계 구축과 데이터 이용 장벽 완화를 위한 「국가데이터기본법」 추진('26.5. ^{의원발의})

- 데이터 관련 민·관 전문가와 수요자* 의견수렴을 거쳐 제정안 마련

* 정부, 민간기업, 데이터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국가데이터특별분과 및 민관협의체 가동('26.2월~)

국가데이터기본법 제정(안) 주요 내용



- **(정책 맞춤형 융합데이터 개발)** 복잡한 사회·경제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전수등록부를 바탕으로 공공·민간데이터를 연계한 융합데이터 구축

- 주택 정책 지원을 위한 주택소유자등록부^{잠정}, 고용과 취업활동을 파악하기 위한 취업활동등록부^{사업자등록번호 기준} 구축('26.6.)

- **(AI 통계 메타데이터)** AI 친화적 통계 메타데이터 구축을 위한 정보화 전략계획(ISP) 및 정보보호 기술 도입을 위한 연구 추진

- AI가 통계데이터를 해석·추론할 수 있도록 정형화된 형식·연결구조로 설계된 통계 메타데이터 구축 전략(ISP) 추진('26.3.~)
- 안전하고 활용 가치 높은 데이터 제공을 위해 AI 기반 집계자료 비식별화 처리 및 재현자료 생성 연구 사업 착수('26.3.~)

< 주요 우수사례 >

▶ 주택소유자 등록부(잠정) 조기 구축('26.6.)

데이터 기반의 실효성 있는 주택 정책 지원을 위해서 기존 통계 뿐만 아니라 여러 데이터를 연계한 종합적 분석용 데이터 필요

- 주택소유통계와 행정자료를 연계한 「주택소유자 등록부」를 신속하게 구축하고자, 등록부 구축 단계부터 잠·확정체계를 도입하고 최신자료 활용을 통해 시의성 확보
- 자료입수 및 행정적 처리, 자료 내용검토 단축을 통해 '25년 기준 주택소유자 등록부(잠정)를 조기 구축 📌 기존 등록부 구축 기간 대비 '8개월 이상' 단축

2 국정과제를 뒷받침하는 통계 서비스 및 인프라 강화

- **(국가통계 확충)** 지역 균형발전과 가사노동에 대한 가치 측정 등 경제·사회정책 지원을 위한 통계 확충
 - **(지역균형 지표)** 재화·서비스의 지역 간 이동과 지역 내 공급·소비 구조를 파악하기 위한 「지역공급사용표」를 개발·공표('26.5.)
 - * 캐나다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지역별 공급사용표 정례화
 - **(가사노동 지표)** 저출산·고령화 및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등에 따른 무급 가사노동의 가치 변화와 흐름에 대한 「국민시간이전계정*」 최초 공표('26.6.)
 - * 무급 가사노동 가치(가계생산위성계정('26.4))의 세대 간 흐름에 대한 분포
- **(통계 서비스 확대 및 제도 개선)** 국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통계 서비스를 확대하고, 신뢰성있는 통계 생산을 위한 통계제도 개선
 - **(통계정보 시각화)** 이용자 눈높이에 맞게 「데이터 시각화 체험하기*('26.4.)」 및 「업종통계지도**('26.6.)」 서비스 실시
 - * 이용자가 인구, 경제, 보건·복지 등 데이터를 선택하여 다양한 통계 차트(15종) 생성
 - ** 소매업·외식업 등 생활밀접업종과 용접·산업용로봇 등 뿌리산업을 업종·매출·인구 측면에서 분석·시각화
 - **(통계오류 수정·공표 관리 규정 제정)** 통계오류 처리 절차를 표준화한 법적 근거(예규)를 마련하여 통계 신뢰성 확보('26.6.)
 - **(우체국 네트워크를 활용한 협력체계 구축)** 집배원이 조사구 확인 및 가구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통계조사 현장 접근성과 행정 효율성 제고
 - * 가구주택기초조사 1차 시험조사('26년), 지역별고용조사('27년)

〈 주요 우수사례 〉

▶ 지역균형 지표로서의 지역공급사용표 최초 공표

시도·생산물 단위의 방대한 행렬 연산을 처리하는 자체 균형화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지역 간 경제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지역경제 흐름지도** 첫 공표

👉 '5극 3특' 권역·지역 간 공급망을 '최초' 파악하고, 공표 시기를 계획보다 '3개년' 단축

II. 핵심 추진과제

1 역점 과제

목표

국민의 삶을 지원하는 국민 중심 AI·데이터체계

추진 방향

- AI 데이터 관리체계 구축 및 활용
- 데이터 거버넌스 및 허브 구축
- 정책 맞춤형 통계·데이터 서비스

추진 전략

1. AI 데이터 관리체계 구축 및 활용

- ① 범정부 AI 데이터 관리체계 구축
- ② AI 친화적 데이터 활용

2. 데이터 거버넌스 및 허브 구축

- ①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
- ② 데이터 허브 구축
- ③ 데이터 허브 보호

3. 정책 맞춤형 통계·데이터 서비스

- ① 현안대응 지표 개발
- ② 통계정보서비스 개선

1 AI 데이터 관리체계 구축 및 활용

- **(범정부 AI 데이터 관리체계 구축)** 국민 생활 전반에 대한 AI 서비스를 위해 전 영역에 걸친 DB 구축 추진 및 데이터 품질관리 표준 마련
 - **(AI DB 구축·관리방안 마련)** 각 부처별 정책자료*를 AI 데이터로 구축 필요
→ 국가데이터처 특화형 AI로 선도모델을 구축('27~'29년)하여 범정부 확산('29년)
 - * 공공데이터포털의 공개용 공공데이터가 아닌 각 부처 내부용 정책자료·계획문서, UN-OECD 정책보고서 등을 의미 → AI 기능 향상을 위해서는 맥락정보 학습이 필요
 - 각 부처의 특화형 AI 데이터에 깊이 있는 추론이 가능하도록 표준화된 데이터 품질 기준을 공통 적용
 - 과학적 데이터 관리 원칙*에 따른 부처별 AI DB 시스템 구축·운영** 지원
 - * 차세대 데이터전략: 큰 데이터(Big-Data)보다 고품질 데이터(Good-Data) 구축 → 중복 제거, 고품질 데이터 선별로도 AI 성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데이터 관리
 - ** 각 기관별 CDO 책임하에 데이터 개방·품질관리 등 추진
 - **(국가 AI DB 구축)** 각 부처가 구축한 특화형 AI의 DB를 클라우드로 연계
⇒ '모두의 AI'를 위한 DB로 활용 및 대국민 서비스
 - AI 데이터 기반 구축을 위한 표준 방법론('27년), 특화형 AI 플랫폼 및 모두의 데이터카탈로그('27~'29년), 각 기관 데이터 연결 및 모두의 AI에 제공('29년~)
 - * 기관의 업무 데이터를 지식화·구조화, 정부 및 국민 모두의 자산으로 활용하는 기반 마련
- **(AI 친화적 데이터 활용)** AI 신뢰성과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AI 친화적 메타데이터를 구축
 - **(통계 메타데이터 구축)** AI가 공식통계 DB에 기반하여 환각 없이 답변할 수 있도록 AI 친화적 통계 메타데이터(온톨로지*) 구축
 - * 특정 분야의 지식을 구조화하여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정의한 개념 체계

'26년	'27~'28년	'29년~
5종 통계 대상으로 시범 구축 (연말 국무회의 시연 예정)	통계 메타데이터 구축	국가 메타데이터 구축

② 데이터 거버넌스 및 허브 구축

-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 국가 최고데이터책임자^{CDO}로서 분산된 데이터를 총괄·조정하고 데이터가 제대로 활용·관리될 수 있도록 거버넌스 추진
 - **(국가데이터기본법 제정)** 국가데이터위원회 설립, 국가데이터* 지정·관리 및 연계·활용 기반 구축 등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법제정 추진('26.12.)
 - * 공공가치 및 국민·정책 수요가 높은 데이터를 국가데이터로 지정
 - **(국가데이터 제도 기반 마련)** 데이터 관리를 위한 품질관리 및 분류체계, 실태·수요조사^{파일럿 조사} 추진으로 체계적인 국가데이터 관리체계 마련('26년)
- **(데이터 허브 구축)** 데이터처의 전수등록부(Hub)와 범정부 데이터센터(Spokes) 정보를 안전하게 연결하는 '모두의 국가데이터' 체계 마련('27년)
 - **(데이터처^{Hub})** 인구·가구·주택·기업등록부와 맞춤형 융합데이터* 등
 - * (기존) 청년, 아동, 취업활동, 연금 등 → (금년 말) 주택소유자, 고령자, 사망자^{신규 제공}
 - **(타 기관^{Spokes})** 범정부 데이터센터*^{21개소}의 국세·금융·의료·교육데이터 등
 - * 국세통계센터, 금융혁신·건강보험·보건의료 빅데이터센터, 교육데이터안심센터 등

⇒ **한곳에 데이터를 모으지 않고, 센터 간 전용망으로 연결·활용 체계 구축**
- **(데이터 허브 보호)** 양자컴퓨팅으로도 풀 수 없는 新데이터보호기술 도입으로 AI 미토스 등 보안 위기로부터 '모두의 국가데이터' 보호 강화('27년)
 - **(동형암호)** 암호화 상태에서 데이터 보관·연계·연산이 가능한 동형암호* 기술 실증('26.12.), 동형암호 기반 결합·분석 시범 시스템 구축('27년)
 - * 물리적 공격 및 데이터 침탈에도 암호화된 데이터의 복호화가 불가능한 기술
 - **(재현자료)** AI 학습용 데이터 제공을 위한 재현자료* 자동 생성 시스템 도입으로 민감정보 노출 없는 데이터 개방 추진('27년)
 - * 원자료와 통계적 특성이 유사한 합성자료 → 민감정보 식별 불가능

모두의 국가데이터(Hub & Spokes) 실현(안)



③ 정책 맞춤형 통계·데이터 서비스

- **(현안대응 지표 개발)** AI 등을 활용한 정책 지원 지표 발굴로 데이터 신호등 역할 및 민생 대응 지원
 - **(서민물가 안정)** 민생품목 가격 변동에 대응한 신속한 물가정책 지원을 위해 AI 기반 물가 모니터링 지표 및 시스템 개발('26.12.),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 * 관계부처(재정경제부, 국가데이터처, 농식품부, 해수부 등) 합동 추진 및 공유 예정('27년)
 - **(정확한 기사 식별)** 통계 오(誤)인용 신속 대응을 위해, AI를 활용하여 통계 인용 기사 자동 식별 및 공식 통계자료와 비교·검증하는 시스템 구축('27~'28년)
 - * 성공적인 시스템 구축을 위한 AI 기반 통계인용 확인시스템 사전검증(PoC) 추진('26.4.~8.)
 - **(국민안전 모니터링)** 안전사고 예방과 이동편익 제고를 위한 AI 기반의 주요 지역 명절·축제·행사 인구밀집도 예측* 정보 제공('27년)
 - * 통신데이터 기반의 유동인구 및 밀집도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환경 변수 데이터 활용
 - **(생애주기별 지표 서비스)** 아동·청년·중장년층·고령자별 특성과 변화를 분석한 맞춤형 지표 제공('26.9.~12.)으로 생애주기별 정책 지원

아동 ^{18세 미만}	청년 ^{15~39세}	중장년 ^{40~64세}	고령자 ^{65세 이상}
아동 및 양육 부모의 주거, 부모 일자리 등 아동가구 정보 시각화	하루 생활·소비 패턴을 분석한 '청년 생활시간 변화상' 분석	소득과 소비, 노동, 노후준비 등에 대한 인식변화 심층 분석	주제별(건강, 안전 등) 분석을 통한 '고령자 삶의 질' 심층 파악
'26.12.	'26.10.	'26.9.	'26.12.

- **(통계정보서비스 개선)** AI를 활용한 이용자 맞춤형 통계서비스 개선
 - **(국가통계포털^{KOSIS} 고도화)** 생성형 AI와 데이터 연계기술(MCP)를 활용한 국가통계포털 검색·활용 시범서비스*('26.7.) 및 고도화** 추진('26.12.)
 - * 일상언어 질의로 국가통계포털(1,360여종의 26만여개 통계표)을 기반으로 이용자가 원하는 통계표를 정확하게 생성 및 검색·융합·분석까지 한 번에 수행하는 서비스
 - ** 시범서비스 이후 이용자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27년부터 정식 서비스 추진 예정

2 지방주도 성장 과제

① 균형성장을 위한 통계 확충

- **(균형성장 및 경제활성화 지원)** 지역경제 성장 지원을 위해 지역투자 동향과 생활인구, 산업생태계 변화와 구조를 신속하게 파악하여 제공
 - **(지역투자동향지표 개발)** 경제선순환 구조파악 및 지역균형발전 정책지원을 위해 지역투자동향지표 개발('26.12.)
 - **(지역맞춤형 생활인구)** 지역 고유 특성에 따른 맞춤형 심층분석으로 관광형 체류인구 구조 분석^{가평군}, 도서형 지역 접근성 대응^{신안군}, 도시형 구도심 활성화^{대전 중구} 등 지역 활성화 정책 지원('26.12.)
 - **(경제총조사 공표)** 산업생태계 변화 파악을 위한 지역의 산업별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26.12.), 최근 산업 구조 및 사업체 특성('27.6.) 등을 공표
- **(인구 및 가구 구조 변화 파악)** 지역정책 수립의 기초자료인 지역별 인구·가구 및 생활기반 시설에 대한 현황 자료 제공
 - **(인구주택총조사 공표)** 가족돌봄*, 결혼의향, 자녀계획, 활동제약, 다문화 가구·외국인 현황, 반지하·옥탑방 거주 가구**의 지역별 현황 공표('26.11.)
 - * 연령·지역별 가족돌봄 통계 신규 공표 → 통합돌봄 수요 및 돌봄일자리 규모 예측을 뒷받침
 - ** 반지하·옥탑방 가구 등 취약계층 현황 파악 → 주거환경 개선 정책 수립에 기여
 - **(농림어업총조사 공표)** 농림어업 경영 가구 및 가구원의 규모·특성에 관한 지역별 현황 공표('26.9.) 및 농산어촌의 필수서비스 취약지역 지원을 위한 행정리별 생활기반(교통·의료·문화·복지 등)* 통계지도 서비스('26.12.)
 - * 대중교통, 생활편의시설 및 기반시설 등 농산어촌 필수 시설 현황

② 지역 데이터 확충 및 서비스

- **(지역등록부 시범 구축)**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지역등록부* 시범 구축을 통해 지역균형성장 정책 수립 기반 조성**('26.12.)

* 지방정부 보유 행정자료와 등록부를 연계하여 지역단위 등록부 작성

** 정책 대상의 정확한 발굴, 지역 현안의 신속한 분석, 정책 효과의 객관적 평가로 데이터 기반의 지역행정 구현

- **(지역단위 민·관 결합데이터 서비스)** 등록부 등 공공자료와 통신·카드자료 등 민간자료를 지역단위로 가명 결합하여 다양하고 시의성 있는 자료 제공('26.12.)

공공	민간
인구·가구·주택·취업·청년·아동가구등록부, 주택소유 및 신혼부부통계	SK텔레콤, KCB, 신한카드, SK브로드밴드, 카카오 모빌리티 등

- **(지역 현안 데이터 분석)** 데이터 연계·활용으로 지역 현안 데이터를 분석하여 지방주도 성장 지원

- **(수도권)** 수도권 생활인프라* 개선 데이터 분석('26.11.), 가평군^{관광지역} 맞춤형 생활인구 구조 분석('26.11.) 등

* 서울(폭염대비 온열질환 위험도), 안산(외국인 행정·안전 수요), 구리(직업훈련 인프라), 서울 성동구(옥외광고물 경제가치)

- **(동북권)** 대구·경북·강원 생활권역별 소비특성 분석('26.12.), 데이터로 살펴본 강원 접경지역 변화 분석('26.12.) 등

- **(호남권)** 강진군 반값여행 정책 분석('26.10.), 신안군^{도서지역} 맞춤형 생활인구 분석('26.11.) 등

- **(동남권)** 부산지역 청년 이동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소비 분석('26.8.), 부산 골목상권 분석('26.10.), 동남권 연령대별* 이슈 분석(~'26.12.) 등

* 아동('26.10.), M-부모(30대 후반)('26.12.), 끼인세대(40~54세)^{기완료('26.6.)}, 신노년(65~75세)^(26.7.)

- **(충청권)** 청년층 인구 유출 등 지역 현안 대응 및 정책 지원을 위한 청년 이동, 1인 가구, 상권 및 생활인구 관련 충청 지역 특성 분석('26.12.)

3 국가정상화 과제

① AI 기반 24시간 중단없는 국가데이터 분석 서비스 제공

- **(국가데이터 분석시간 확대)** AI 기술을 적용한 「AI 코드 안정성 검사기」를 도입, 24시간 중단 없는 대국민 국가데이터 분석 환경 제공
 - **(제안 배경)** 통계데이터센터 내 민간데이터 등 대용량 빅데이터의 연계 및 분석 수요가 폭증하나, 업무시간(09~18시) 내에만 제한적으로 운영
 - 야간 무인 가동 시, 통계분석 프로그램 에러 발생 등으로 시스템 과부하 또는 셧다운 위험성이 있어 정규 업무시간으로 이용 제한
 - **(혁신 방향)** 「AI 코드 안정성 검사기」를 자체 개발 및 도입하여, 시스템 장애 위험 요인을 AI가 사전에 검증하고 차단하는 체계 구축
 - 대전센터 및 서울중구센터 등 주요 거점에서 시범 서비스 선행(6.1.), 시스템 안정성 최종 확인 후 전국 SDC로 전면 확대 실시(7.1.)

구분	AS-IS	TO-BE
분석 가능시간	9시간 (09:00~18:00 업무시간 내)	24시간 (야간 및 주말 무인 가동 포함)
장애 대응방식	통계분석 프로그램 에러 발생 시스템 강제 종료	AI 기반 에러 코드 사전 식별 및 시스템 강제 종료 원천 차단

< 현장 목소리 >

- ▶ 통계데이터센터 이용자 간담회를 통한 이용자 의견에 기반하여 과제 발굴 및 개선
 - **(이용자 목소리)** 대용량 빅데이터 분석 등 데이터 분석에 소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 통계데이터센터 운영시간 중단에 따라 분석 업무를 강제로 종료하는 어려움 발생
 - ⇒ **(개선)** 24시간 무중단 분석 지원을 통해 밤새 데이터 분석이 이뤄지고 다음날 아침에 분석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되어 국민의 이용 편의성 획기적으로 향상

② '더 빠른' 등록부 구축·제공

- **(등록부 신속 구축)** 신속한 데이터 분석 지원을 위해 잠정체계 도입 및 구축 주기 세분화로 등록부 제공 시기 단축
 - **(제안 배경)** 기존의 등록부는 완성도 및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장시간 품질점검 및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구축하여 약 1년 소요
 - 자료구축 기준 시점과 정책수립 시점의 차이로 인해 등록부의 활용도가 낮다는 문제 제기(정책부처, 연구기관 등)
 - * 예시: '24년 기준 취업활동 등록부(연간)를 '26년 6월에 제공
 - **(혁신 방향)** 등록부 구축 시에 잠정 체계를 도입하고, 기존 연간에서 월간 및 분기로 구축 주기를 단축하여 신속성 향상
 - (잠정체계 도입) 자료입수 시차에 따른 최신자료 확정 지연 극복을 위해, 잠·확정체계를 도입하여 시의성 있는 등록부 구축
 - * 예시: '25년 기준 주택소유자 등록부 잠정 구축('26.6월), 확정 제공('27.1월)
 - (월간 및 분기 신규 구축) 취업활동 등록부 구축 시에 최신자료를 활용하여 기존 연간에서 월간·분기 등록부를 신규 구축·제공
 - * 예시: '27년 1월 취업활동 등록부(월간)를 '27년 5월에 제공

< (예시) 융합데이터 시의성 개선(안) >

제공자료	AS-IS	TO-BE
주택소유자 등록부	• 확정 자료만 제공(주택소유통계) • 기준시점~통계 공표 12개월 소요	• 잠정체계 도입, 등록부 신규 구축 • 기준시점~구축잠정 7개월 소요(△5개월)
취업활동 등록부	• 연간 자료만 제공(잠정, 확정) * 월간, 연간 입수자료 모두 활용 • 기준시점~제공 14개월 소요	• 월간, 분기 신규 구축 * SBR(월분기) 인구가구(전년) 자료 활용 • 기준시점~제공월간 4개월(△10개월)
기업등록부 (연간)	• 확정 자료 이용 • 기준시점~제공확정 16개월	• 잠정 자료 이용 • 기준시점~제공잠정 12개월(△4개월)

4 기타 현안과제

① 현실 반영도 제고를 위한 통계 개선

- **(소비자물가지수 개편)** 소비지출 변화를 반영한 대표품목 및 가중치 산정을 통해 현실 반영도를 높인 '25년 기준 지수 개편·공표('26.12.)

* 품목선정(안) 공개의견수렴(7~9월) → 지수개편 결과 국정위 상정(11월) → 결과 공표(12월)

< 2025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 개편(안)>

대표품목 조정	- (추가) 소프트웨어구독료, 클라우드저장공간이용료, 전기차충전료 등 10개 - (제외) 땅콩, 도라지, 유치원납입금, 저장장치 등 13개
집세 행정자료 활용	- 기존 현장조사 ^{1.2만가구/월} 에서 '주택임대차 신고' 전수자료 ^{22만건/월} 활용으로 작성방법을 개선하여 통계의 현실 체감도 향상, 국민의 응답부담 경감

- **(쌀 소비량 통계 개선)** 식량안보, 물가정책의 기초자료인 국민의 양곡 소비 실태가 인구 및 가구구조, 식생활 변화 등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통계 개선

* 국정감사('22년 조해진 의원, '25년 정일영 의원), 언론('22년 '24년 '25년 농민신문, 농정신문, 한겨레, 이데일리 등) 쌀 소비량 정확성 문제 제기 및 개선 요구

- 양곡소비량조사 가구의 외식부문 쌀 소비량 개선을 위한 시험조사* ('26.11.) 및 개선 추진('27.11.)으로 식량안보 강화

* 기존 외식 쌀 소비량을 가구원 대상 조사에서 외식업체 등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전환

- **(장래인구추계 작성)** 급변하는 인구 변화에 대응하고 시의성 있는 정책* 수립 지원을 위해 추계 주기를 단축하여 '25년 기준 장래인구추계 작성·공표('26.12.)

* 국가 재정 중장기 건전성, 인력 수급 및 지방 인구 감소 등 미래대비를 위한 선제적 대응 지원

② 데이터산업 육성 지원 기반 조성

- **(데이터산업 특수분류 제정)** 활용성 높은 데이터산업 특수분류 개발로 R&D 예산 지원, 전문 인력 양성 등 데이터산업 정책 기반 조성

- 데이터산업 특수분류 개발 기초 연구(~'26.11.), 관계기관 협력을 통해 데이터산업 포괄 범위·분류 체계 등 기준에 대한 특수분류 제정('27년)



국가데이터처

Ministry of Data
and Statistics